

민주, 지방주도성장 균형발전 등 지방선거 공약 내놔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200개 세부공약 체계 신산업성장·경제대도약·기회 보장·민생안정 등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의 일개인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약의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신산업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공개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이다.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제시됐다.

AI 등 신산업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

의 정책과제로는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창업·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등이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선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 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모두의 성장·문화가 이끄는 성장·안전에 기반한 성장·지방주도 성장·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가 지선 공약에 반영됐다.

정책위는 이날 발표한 비전과 정책과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김태연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참석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를 뒷받침하는 '세부공약 200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정책위는 이날 △메가특구 지정 △기후후보 도입 △우리아이저리펀드 도입 △햇빛소득마를 확대 △지원주책 확

대를 주요 공약으로 공개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공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그걸 넘어선 지역 맞춤형 지원 성장 엔진을 확

보하고자 한다"며 기업이 요청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세계 최고의 규제 프리존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아이저리펀드에 대해서는 "부모가

5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 하는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한부모가족이나 장애 아동 등에 제한되어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민형배 "전남광주 탄소중립 목표 2045년으로 통합해야"

폭염·공원·에너지·주거 등 생활밀착형 5대 정책 제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후보(사진)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현재 각각 2045년과 2050년으로 나뉘어 있는 광주와 전남의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으로 통합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민형배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는 2045년, 전남은 2050년이라는 서로 다른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통합특별시는 단순 행정통합이

아닌 더 높은 기준으로 도약하는 과정인 만큼 광주의 2045년 목표를 전남광주 전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탄소중립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그동안 제시해온 RE100 산업단지, 에너지 전환, 광역 BRT 중심 교통체계, 물순환 도시 구축 등을 탄소중립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하면서 "이제는 산업과 인프라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그는 시민의 생활 속 변화를 중심으로 한 '생활형 탄소중립 정책'을 제시했다.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기후 안전도시 조성, 도로 10분 내 접근 가능한 생활권 공원화 및 녹지 확대, 학교와 경로당 등 공공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시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발전소 확대, 에너지 전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남광주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민형배 후보는 "탄소중립은 산업단지나 교통망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더 시원한 거리와 더 가까운 공원, 줄어든 냉난방비와 지역으로 돌아오는 에너지 수익을 통해 시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의 변화로 증명하겠다"며 "전남광주를 산업과 교통이 앞서가는 도시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시민체감형 탄소중립 특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신지혜,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청년첫경력보장제·청년시기본교육 등 공약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사진)이 광주 광산구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산구 주민의 진보 정치에 기대에 응답해 모두의 미래를 여는 광산구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신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 2기 대표로, 창당 때부터 당 지도부로 차세대 진보정당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기본소득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주 진보진영의 연대연합을 통한 개혁정치 실현에도 앞장서왔다.

그는 "진보정당들이 행정통합에 머무는 거를 때 기본소득당은 통합특별시 미래를 설계해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 비전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개혁적으로 결연할 정당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일당 독점으로 인해 정체된 지방정치 30년이 광주를 가난한 도시로 만들었다"며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혁



신으로 광주발전을 이끌어 낼 적기이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 광주의 위기를 끊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청년첫경력보장제 △청년시기본교육 등 AI 전환기 청년정책을 광산구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의 이름으로 산업혁신을 일으켜 광주시민의 소득을 높이고, 호남도 잘 사는 미래를 만들겠다"며 "담대한 변화에 광산구민의 한 표를 과감히 투자해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단수 추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장 후보(사진)로 이정현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 위원회는 22일 중앙당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정현 후보를 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단수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덕홍 공천위원장은 "이 후보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폭넓은 정치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변화와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 경륜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제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이후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는 전남 순천에서 연이여 당선되며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공천을 신청했던 안태욱 전 광주시장위원장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홍 공천위원장은 "향후 광주 광산구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당의 새로운 도약과 승리를 위해 변함없이 힘을 모아주시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강은미, CU 사망 사고 규탄... 직접교섭 촉구 통합특별시 노동국 신설·노란봉투법 지원단 공약

정의당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가 CU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원청기업 BGF리테일을 규탄하며 직접 교섭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은미 후보는 2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참변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직접 교섭을 거부한 채 노동자를 버려진 상태로 내몬 원청과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한 고용노동부가 만든 비극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원청이 교섭에 나서

도록 한 제도"라며 "BGF리테일이 교섭 요구를 묵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조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고용노동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사측의 '대화'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교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을 다녀간 노동부 장관이 사안을 단순한 감정적 갈등으로 호도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후보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자성 부정 중단, BGF리테일의 손해배상 및 노조 탄압 중단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통합특별시 노동국 신설, 노란봉투법 지원단 구성 등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민주당 전남도당·대구시당, 공동협약 체결 영호남 상생·통합 기반 구축...지방선거 압도적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대구시당을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하나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공동 협약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양 시·도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해 전국적 선거 승리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영호남 지역 간 오랜 갈등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질서

를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 실천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식에서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은 "영호남이 함께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된 민주당으로서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당은 공동 협약을 통해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사명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책임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원이 위원장은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해 지지와 응원의 뜻을 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전남도당은 이번 대구광역시당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과 27일 경남도당, 경북도당, 울산시당을 잇따라 방문해 전국 단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차영수, 군민 참여형 에너지 모델 공약

강진군 출사 결함...마을 자부담 낮추는 방안 제시

차영수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수 후보(사진)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군민 소득을 높여준다는 구상을 내놨다.

차 후보는 22일 "농어촌 소득지원의 새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과 국회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강진과 가장 빠르게 연결해 군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햇빛소득마을'을 확산하고 올해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동체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 예산 규모는 4500억~5000억 원 수준이다.



차 후보가 제시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구축을 연계해

군민 소득 증대와 마을 발전, 지역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안은 문군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해 제도와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